

담양군 농업인 이익 대변 '농업회의소' 출범 임박

오는 30일까지 읍면 설명회...주민 공감대 형성

농업인 위한 최고의 농정 파트너 역할 기대 고조

담양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할 '담양군 농업회의소'가 연말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서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회원모집에 나섰다.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인, 농업단체 등을 아우르는 대표 조직으로 담양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다.

지난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지난 8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 제도적인 준비를 끝낸 상태다.

군은 9월과 10월 회원 모집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해 오는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정식 임원진과 대의원을 선출하고 연내 정식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담양군은 '담양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제정 공포한 상태로 '담양군 농업회의소'를 담양군의 농정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구로 법과 제도로 대표성을 띠고,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부여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자발적인 농정 참여·관리를 비롯 지속 가능한 농정시스템 구축, 담양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 담양 농업과 농촌 정책에 대한 정책 연구와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 WTO지위 박탈 논의, 일본의 한국 배색 국가 제외 결정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농업인의 통일된

목소리를 대변할 대의기구 부재로 이러한 위험요소에 탄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담양식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농업회의소는 전국에 현재 15개소가 설립 운영 중이며, 담양군을 포함해 지난 9월 신규 선정된 5개 시·군 등 총 18개소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 황룡강 황미랜드 1만평 해바라기 활짝 10월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위해 심은 해바라기가 23일 장성 황룡강변 황미랜드에서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다.

생활을 즐겁게!
미래를 신나게!

2019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

2019 Yeonggwang
e-mobility Expo

2019.9.26. - 9.30. 영광스포티움

주최 신임행정지원부 전라남도 영광군 KATECH 자동차부품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주관 국제스마트e-모빌리티엑스포조직위원회

광주·전남 '교권침해' 최근 5년간 1162건

김한표 "예방책 마련해야"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11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와 폭행,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 1만5103건에 달했다.

이중 광주의 경우 697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 2017년 163건,

2018년 63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 2017년 85건, 2018년 102건 등 466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봉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며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

민·관 합심해 방역 공감대 형성, 예찰 예방 강화

보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철통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확진되자 보성군은 곧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돼지관련 축산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기차와 축산차량의 이동을 막은 뒤, 농장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축산단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철통차단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한 단협회 관계자는 "우리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면 돼지농가는 모두 전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 청정축산 보성을 사수하겠다."며 차단방역 의지를 나타냈다.

보성군은 현재 최첨단 소독시설을 갖춘 보성 거점 소독 시설에서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축산차량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돼지사육농장과 공무원을 맨투맨으로 연결한 1농장 1담당관제를 통해 질병예찰에 힘을 쏟고 있으며, 농장입구에 소독용 생석회를 까는 등 축사 내·외부 및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자체 소독이 어려운 영세농가는 축협가축공동방제단의 소독지원으로 차단 방역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타 시도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 출하 시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출하를 금지하며 전파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방백신이 개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입되면 우리군 한돈산업과 축산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황종료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쓸 것"이라며 "축산농가를 비롯한 주민들께서도 불법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농가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돼지사육농가에 80여톤의 축사 소독약과 야생멧돼지 기피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농장진입을 막기 위해 돼지사육농장 울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청 보유 소독차량과 가축공동방제단 7개단을 동원하여 주1회 이상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보성=인규일 기자